

#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 contents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이주의 초점 1. 美, IRA 발효로 전기차업계 비상



관세·무역  
NEWS

2. 韓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6개월로 단축
3. 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4. 관세청, 디스플레이산업 제품 품목분류 지침 발간
5. 각 분야 배점 40% 미만 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6.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개정법령

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8.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민원사례

9. Tax Refund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의 과세가격
10. 수입신고 가능 주체



기타  
관세소식

11. 코트라, 물류지원 특별대책 가동...400여개사 지원
12. KOSA, 22일 코엑스서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Cover

## 美, IRA 발효로 전기차업계 비상 - I

미국과 FTA 체결국 배터리 원자재 확보 시 배터리 기업은 호재 전망

### 이주의 초점

'한국 사위'로 우리에게 친숙한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과 메릴랜드의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월 13일 한국을 방문했다.

### 관세·무역 NEWS

2024년 미국 대선 잠룡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래리 호건 주지사는 이번 방한을 앞두고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문제를 언급하며 워싱턴 행정부 인사들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이슈가 뜨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개정 법령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돼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부 및 자동차업계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민원 사례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코로나 전(2019년) 대비 9.7% 감소한 8,455만대 였으나, 전기차 판매는 226.3% 증가한 660만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021년 기준 1,600만대를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기타 관세소식

Cover

## 美, IRA 발효로 전기차업계 비상 - II

이주의  
초점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 및 증가율 1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 역시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꾸준히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각 전체 전기차 수출의 16%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같은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관세·무역  
NEWS

전 세계 전기차 사용 증가에 힘입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량 증대를 꾀하던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는 미국의 IRA 발효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됐다.

개정  
법령

8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 한화로 910조원에 해당하는 지출 계획을 담은 IRA에 서명하며 정식 발효됐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원  
사례

해당 법안 중 최근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부분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 美, IRA 발효로 전기차업계 비상 - III

이주의  
초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 ▲미국에서 조립·생산, ▲배터리·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를 혜택을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무역  
NEWS

전기차 배터리는 칠레나 호주, 아르헨티나에서 광물을 채취해 중국에서 정제와 제련을 거쳐 국내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의 84%가 중국산이다.

개정  
법령

대표적 원자재인 수산화리튬만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469%, 6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84%가 중국산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원  
사례

이에 따라 정부가 對美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법안 변동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사실상 IRA는 중국산 광물을 이용한 배터리를 점차 퇴출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이 40% 이상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원자재 공급문제 해결이 될 경우 한국의 배터리 기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  
관세소식

이주의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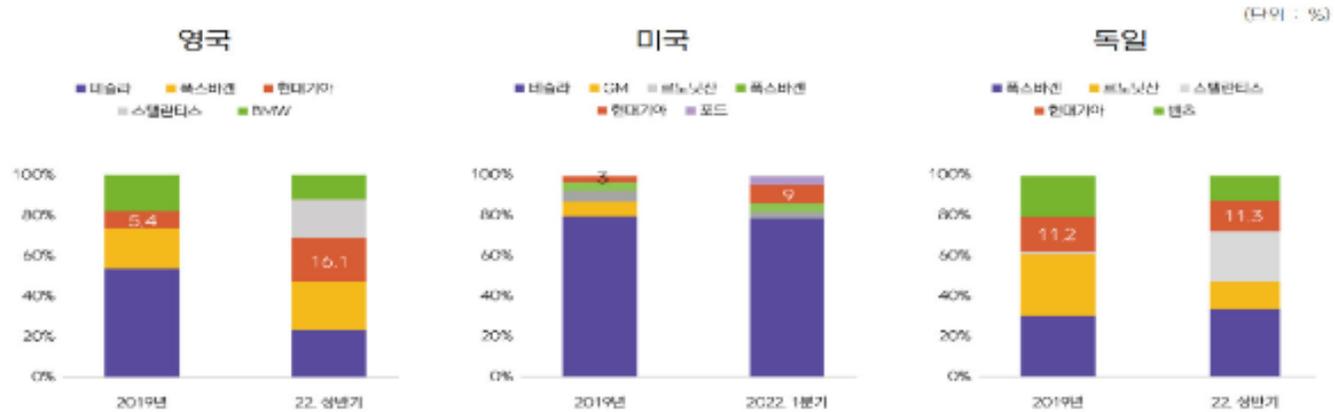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 3대 수출국에서의 한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추이(2019년, 2022년 상반기) ●



주 : 독일과 영국은 전기차(BEV, PHEV) 점유율, 미국은 배터리전기차(BEV) 점유율  
출처 :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한국무역협회

출처 - CUSTRA

## Cover 韓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6개월로 단축 - I

한·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 9월 1일부터 시행

이주의  
초점

특허청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 요건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해당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서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PPH를 이용하면 우리 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해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

한편 프랑스정부는 2019년 5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 법률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됐다.

이에 우리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했고, 7월 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프랑스와 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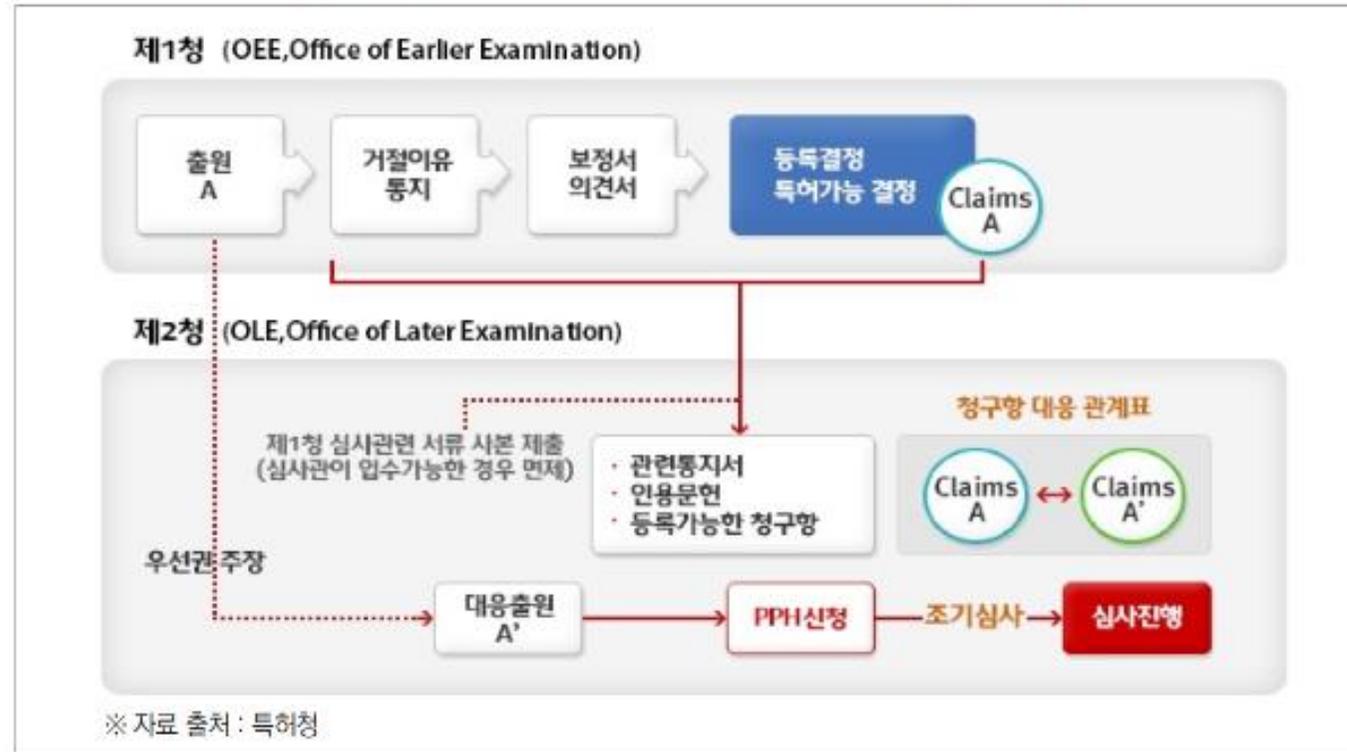
특허청은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과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신속히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한 신흥국들과의 PPH 체결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韓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6개월로 단축 - II

이주의  
초점

●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



출처 - CUSTRA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Cover

## 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 I

폐기물·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 1,101억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이주의  
초점

관세청은 9월 8일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 멸종위기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로, 관세청은 올해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8주간 환경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참고로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이 불법 수입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령

단속 결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5%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6만 8,338% 증가했다.

이는 폐목재 약 34만톤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톤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례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입 단속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900%, 금액 6,340% 모두 증가했다.

이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증가, SNS를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관세소식

●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 실적 ●  
(단위: 건, 백만원)

구분(밀수경로 등)	2020년		2021년		2021.1~8월		2022.1~8월		전년 동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	밀수입	여행자	6	109	-	-	-	-	5	12	순증	순증
		우편/특송	-	-	1	24	-	-	12	33	순증	순증
		일반화물	2	3	5	38	2	10	1	181	△50%	1,710%
부정수입	1	1	1	43	-	-	2	418	순증	순증		
밀수품취득	1	1	-	-	-	-	-	-	-	-	-	
합계	10	114	7	105	2	10	20	644	900%	6,340%		

●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 실적 ●

(단위: 건,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1.1~8월		2022.1~8월		전년 동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정수출 등	7	50	4	211	2	0.2	9	155	350%	77,400%
부정수입 등	4	71	2	1	2	1.4	10	940	400%	67,043%
합계	11	121	6	212	4	1.6	19	1,095	375%	68,338%

출처 - CUSTRA

Cover 관세청, 디스플레이산업 제품 품목분류 지침 발간 - I

기업비용 절감·국제분쟁 대응·산업 이해도 제고 기대

이주의  
초점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2021년 기준 21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핵심 전략산업이나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해왔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1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바탕으로, 총 285종의 디스플레이 관련물품(디스플레이 모듈 50개, 제조장비 155개, 원·부자재 80개)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번 지침에 담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공을 통한 수출입기업의 관세 등 비용 절감,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스플레이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2023년에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품목분류 해석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 불명확한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사례(2021년) ●



모니터용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레이(TFT-LCD) 모듈

		※ 품목분류 2017 기준	
제8529.90호 (기타 모니터 부분품)	세액차이 60억원 (3년 수출액 기준)	제9013.80호 (액정 디바이스)	
B국 관세율 0%		B국 관세율 4.5%	

※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업계에서는 분류기준에 매우 민감

자료 : 관세청 제공

Cover **각 분야 배점 40% 미만 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I**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주의  
초점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 의무 제도를 반영한다고 9월 밝혔다.

관세·무역  
NEWS

먼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총점 600점이라도 각 분야 배점이 40%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개선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어 평가기준이 개선되면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동의서 내용 중 일부 서식의 변경이 필요해 점수 공개동의서 양식을 변경한다.

개정  
법령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민원  
사례

세관 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트기 및 보석현미경을 비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장 입점업체 대부분 자체 감정기기를 비치하는 등 실용성이 낮아 시설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특허 접수 시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 서류와 함께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나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 제출 규정이 없어 이를 의무화한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 각 분야 배점 40% 미만 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II

이주의  
초점

아울러 특허심사 일정이 집중돼 기간 내 특허심사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심의 의결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연장된 심의 의결기간을 반영해 기존 서식의 특허(갱신) 처리기간도 변경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 5월 제정됨에 따라 특허심사위원 이해관계 자기점검 체크 리스트 내용 중 일부 서식을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21일까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837)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 2021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의결서 ●

이주의  
초점

평가기준·배점 개선안 도입 여부		
안건	심의 결과	
	가 (可)	부 (否)
평가기준·배점 개선안 도입 여부 -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 다만 총 배점의 40% 미만인 분야에 대한 개선 계획서 별도 제출은 고시 개정 시부터 적용	승 인 (18)	(2)

갱신(이행내역) 평가기준 적용 시기		
안건	심의 결과	
	1(안)	2(안)
갱신(이행내역) 평가기준 적용 시기 (1)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 부터 적용하는 안 (2) 의결 이후 5년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 용하는 안 - 특허 갱신은 특허장 교부일, 의결일 기준이 아닌 특허 기간 을 기준으로 함.	채 택 (15)	(5)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 I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 합의

이주의  
초점

기획재정부는 한국, 미국 등 14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관세·무역  
NEWS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올해 5월 23일 출범 이래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으로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 및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  
법령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한 필라1은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민원  
사례

특히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직면한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타  
관세소식

IPEF 공급망 필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Cover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 II

이주의  
초점

위기대응 매커니즘으로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방안으로는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원활한 국경·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역내 국가 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 기밀을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하기로 했다.

IPEF 필라3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하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법령

이를 위해 청정경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을 목표로 역내 청정조달·탄소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원  
사례

필라4에서 14개 참여국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 III

이주의  
초점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하고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강화에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이행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관세·무역  
NEWS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개정  
법령

이로 인해 참여국 각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  
사례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 IV

이주의  
초점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무역  
NEWS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2. 9. 18.]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 9. 16.,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법제처

[시행 2022. 9. 18.]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 9. 15.,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수출신고 시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고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Cover

## Tax Refund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의 과세가격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Q. 500유로의 제품을 20% Tax Refund를 받아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원가인 500유로인지, 500유로에서 20% Tax Refund를 받은 400유로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과세가격의 결정은 해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무역  
NEWS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해 현지에서 제세 상당액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봐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령

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객에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Tax Free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Tax Free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민원  
사례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해 현지에서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 수입신고 가능 주체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Q. 현재 수입신고가 가능한 주체는 '관세사'와 '화주(자가물품 통관)'로 알고 있는데, 관세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물류회사 등)이 관세사를 고용해 제3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A.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인)에 따라 수입신고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관세법인)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통관취급법인 등)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에 따라 관세사 등은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 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닌 물류회사 등은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 코트라, 물류지원 특별대책 가동...400여개사 지원

### 코트라, 물류지원 특별대책 가동...400여개사 지원

이주의  
초점

코트라(KOTRA)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해 400여개사를 대상으로 물류지원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코트라는 물류난을 해결해 수출증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하반기 물류지원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등 수출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관세·무역  
NEWS

물류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출더하기 물류 특별사업'을 진행한다. 수출기업이 납기를 안정적으로 맞추도록 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골라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에 화물을 보관하고 해외통관, 해외 내륙운송, 반품처리 등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코트라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중소기업 1곳당 최대 700만원씩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해 40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물류사와 협력해 78개국 121개 도시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238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우리나라가 1억 달러 넘게 수출한 국가의 8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외공동물류센터가 2019년 4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애틀랜타, 중국 창춘·하얼빈, 가나 아크라에도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해 해외 물류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법령

코트라는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해 수출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최대 14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물류지원 특별대책을 통해 '찾아가는 물류 컨설팅 서비스'도 실시한다. 기업인이 시간을 쪼개 방문 상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국 각지의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다.

민원  
사례

늘어나는 수출물류비를 절감하도록 기업별로 물류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수출 품목과 수출지역, 운송수단에 맞게 물류비 절감 방안과 조건에 맞는 포워드 발굴 방법을 제시한다. 올해 말까지 100개사 이상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류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인프라와 서비스, 컨설팅을 아우르는 양질의 종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기타  
관세소식

Cover

## KOSA, 22일 코엑스서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 KOSA, 22일 코엑스서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이주의  
초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SW에 특화된 전략물자 제도 및 수출 통제품목 등을 안내하고, 기업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KOSA 홈페이지([sw.or.kr](http://sw.or.kr))나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연합뉴스

#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등